



무성한 경제민주화, A학점짜리는 없다

- 2012 대선 주요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정책 비교

2012.9.21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bkkim21kr@naver.com)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분명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개념이라는 소리를 듣는지도 모른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대선후보로서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방법이다.

세부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은 맥락이라고 말한 박근혜 후보는 낙제점이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편승을 반성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는 의미가 있으며, 시장지상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도 의미가 있으나 둘 다 약하다. 그 밖에 앞으로 경제민주화를 한국 경제의 체제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후보들이 보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도 담았다.

쟁점이 사라진 한국 대선

올해 3월 러시아 대선, 5월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이 있었고, 앞으로 10월 베네수엘라 대선, 11월 미국 대선, 그리고 12월 19일 우리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는 증세와 감세를 둘러싼 치열한 쟁점이 형성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긴축과 긴축 반대를 둘러싼 대립이 날카로웠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선거에 비해서 우리의 대선은 쟁점이 대립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내놓으면서 쟁점은 사라진 셈이다. 이 3대 과제는 주로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일관되게 제안하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도 자





신의 책에서 복지, 정의, 평화를 3대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렇게 각 대선후보들이 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해서 주고받다 보니 ‘가짜와 진짜 논쟁’이나 ‘진정성 논쟁’ 따위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그런 경향이 심하다.

모두가 공감하는 경제민주화, 차이는 실천력

문제는 이렇게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의 말을 쏟아놓고 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와중에 대형 마트 일요 휴무제가 버젓이 무력화되고 있고 서울 마포 합정동 대형마트 신규 입점이 코앞이다. SJM과 만도기계 산업현장에서 불법적인 용역의 폭력으로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열려 있는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키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 주도로 재벌의 경제범죄 형량 강화,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처벌강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차례로 경제 민주화 1호, 2호, 3호, 그리고 4호 법안으로 발의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의 당론인 것처럼 얘기되지만, 고작 새누리당 의원 20여 명만 참여하고 있으며, 막상 박근혜 후보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진정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기 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답답하다. 지난 7월 초로 12개 재벌개혁 법안을 발의했고, 최근 당내 경제민주화 추진 모임 주도로 ‘0.01% 슈퍼부자 기업’ 조세 특례철폐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새누리당에게 경제 민주화 관련 공동 입법 발의하여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상황 주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력한 상황에 있다. 이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확정되었으니, 문재인 후보가 직접 경제 민주화 법안을 진두지휘해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추진 의지에서 실천적 차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세부 법안내용까지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벌 총수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무거운 징계와 엄격한 법집행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나 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그리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거운 과세 등이 그것이다. 여야 합의만



하면 금방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 문은 열려 있고 너무 많은 경제 민주화 법안들이 이미 문서로 잘 작성되어 발의되었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도 이미 모아져 있는 상태다. 통과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누가 법안 심의 의결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인가. 일단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실행 의지 측면에서 낙제다.

진짜 쟁점은 경제 개혁의 철학과 비전

경제민주화의 내용 중에서도 후보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여부다. 박근혜 후보는 반대, 문재인 후보는 찬성, 안철수 후보는 유보로 구분된다. 순환출자 금지도 비슷하다. 박근혜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 문재인 후보들과 안철수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2012년 현재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하면서 제기되어야 할 주요 쟁점이 출자 규제에 관한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다루어져야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식 비판이자 대안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반적 비판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담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엄단의 차원이 아니라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작은 정부'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수단을 폐기하고, 새로운 경제모델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지금 이명박 정부 5년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부정해야 한다. 특히 5년 전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박근혜 후보가 내건 공약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줄.푸.세' 정책이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까지 '줄푸세' 공약이 "지금의 경제민주화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와 경제 민주화가 하나라는 황당한 궤변을 대선후보가 한 것이다.

결국 경제 민주화의 철학과 비전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신자유주의와 경제 민주화 구분도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모든 결함이 김종인 전 의원의 영입 하나로 보완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A학점을 줄 수는 없지만, 특히 박근혜 후보는 철학적으로 낙제이다.

민주통합당도 기존 민주정부 10년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반성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일단 공식적으로는 반성을 했다. 그의 최근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참여정부가 정치 개혁에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굳건한 철학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있었지만 경제 민주화에 대한 철학이 신자유주의와 재벌 대기업의 공세를 이겨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것”이라고 반성했고, “따라서 참여정부를 뛰어넘고, 참여 정부와 달라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도 바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굳은 신념과 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후 발언들에서 이러한 반성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과거 집권에 대한 부담이 없는 안철수 후보는 시장 지상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저는 시장 만능주의를 경계하는데요. 시장 만능주의에 빠지면 탐욕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규제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감시는 강화해야 하고, 시장이 정글이 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다. 물론 지금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일백 년 만의 엄청난 세계경제위기를 목도하면서 내놓은 평가치고는 상당히 약하다. 게다가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이현재 전 장관이 캠프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우려가 된다.

그래도 그나마 안철수 후보만이 “재벌 그룹은 사실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요. 현행법에는 재벌체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주주 중심의 개별회사들만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제대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있죠. 저도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놔두지 말고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라며 그의 저서를 통해 기업집단법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기업집단법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제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의 선결 조건 구조개혁

철학과 비전의 차이는 구조개혁의 차이로 이어진다. 현재 한국경제는 시장에



서 압도적인 힘으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독식하는 재벌 집단과, 기초적인 자기 몫조차 지킬 수도 없는 경제적 약자들인 중소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소비자들로 양분되고 있다. 그리고 지독히 불균등한 거래관계가 ‘시장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고착되고 구조화되었다. 상당한 국가 권력의 개입과 엄청난 노력이 투입되어도 균형 상태로 쉽게 돌릴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구조에 대한 대대적 개혁 없이, 단순히 지금부터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면 과거보다 엄격히 감독하여 처벌하겠다고 하는 ‘불공정 행위’ 엄단이 딱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론이다. 지난 9월 5일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 민주화를 놓고 설전을 벌이자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이 원내대표도 절대 재벌을 감싸는 것이 아니고 시장공정 차원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한 대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헤비급의 재벌과 플라이급의 중소기업에게 이미 시합을 붙여놓았는데, 즉 시합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시합을 인정해 버리고 재벌에게 너무 난폭하게 하지 말고 살살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공정경쟁이 아니라 자유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감춰진 일방적 폭력이다.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은폐된 경제 독재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의 정치 독재를 부인하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경제 독재를 정치적으로 은폐할 생각인 것일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이 점에서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안철수 후보는 저서에서 “경제 민주화란 경제 영역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 패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후보도 출마 선언문에서 이렇게 짚는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약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노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될 때 기업 성과는 더욱 개선됩니다. 그리하여 소수의 강자가 다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약자와 강자가 공존 상생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이 돼야 합니다.”





약자 보호, 소득 분배, 내수 진작

낙제 점수를 보이는 박근혜 후보는 제외하더라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다음의 내용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경제적 약자에게 권한과 협상력을 강화시켜 시장에서 스스로 자기 몫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 경제 현장에서 약자에게 힘을 주고 권리를 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그 자체이자 본령이다. 노동조합결성 요건을 대폭 완화시키고 자율적인 중소기업인 조직들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에게 납품가 협상권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독과점 횡포에 대한 집단 소송제를 확장시켜줘야 하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시민에게 되돌려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에 대한 약간의 규제에는 동의하면서도 노동자를 포함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방안들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른바 ‘권위주의적 재벌개혁’이 박근혜 표 경제 민주화인 것이다.

둘째로, 경제민주화의 요구 속에는 심각하게 누적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안이 담겨있음을 상기하여, 적극적으로 분배구조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초고소득자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중요하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세를 주장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무하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원장은 슈퍼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재벌 증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내수 기반 확립과 이후의 성장모델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대선국면이 다가오면서 점점 경제 침체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 침체를 핑계로 기업을 압박하지 말라며 재벌이 경제민주화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모델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원장의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은 바람직하다. “특히 기업의 성과를 노동자들과 제대로 나누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 부진으로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요. 주주의 이익을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분배와 보상을 해줘서 구매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가져와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세 후보들은 경제민주화를 현재 경제 위기의 돌파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추석 이후 경제 민주화의 주요 논쟁 지점이다.



새사연의 6년 연구결과를 모두 모은 새 책!

리셋코리아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이 출간 되었습니다.

